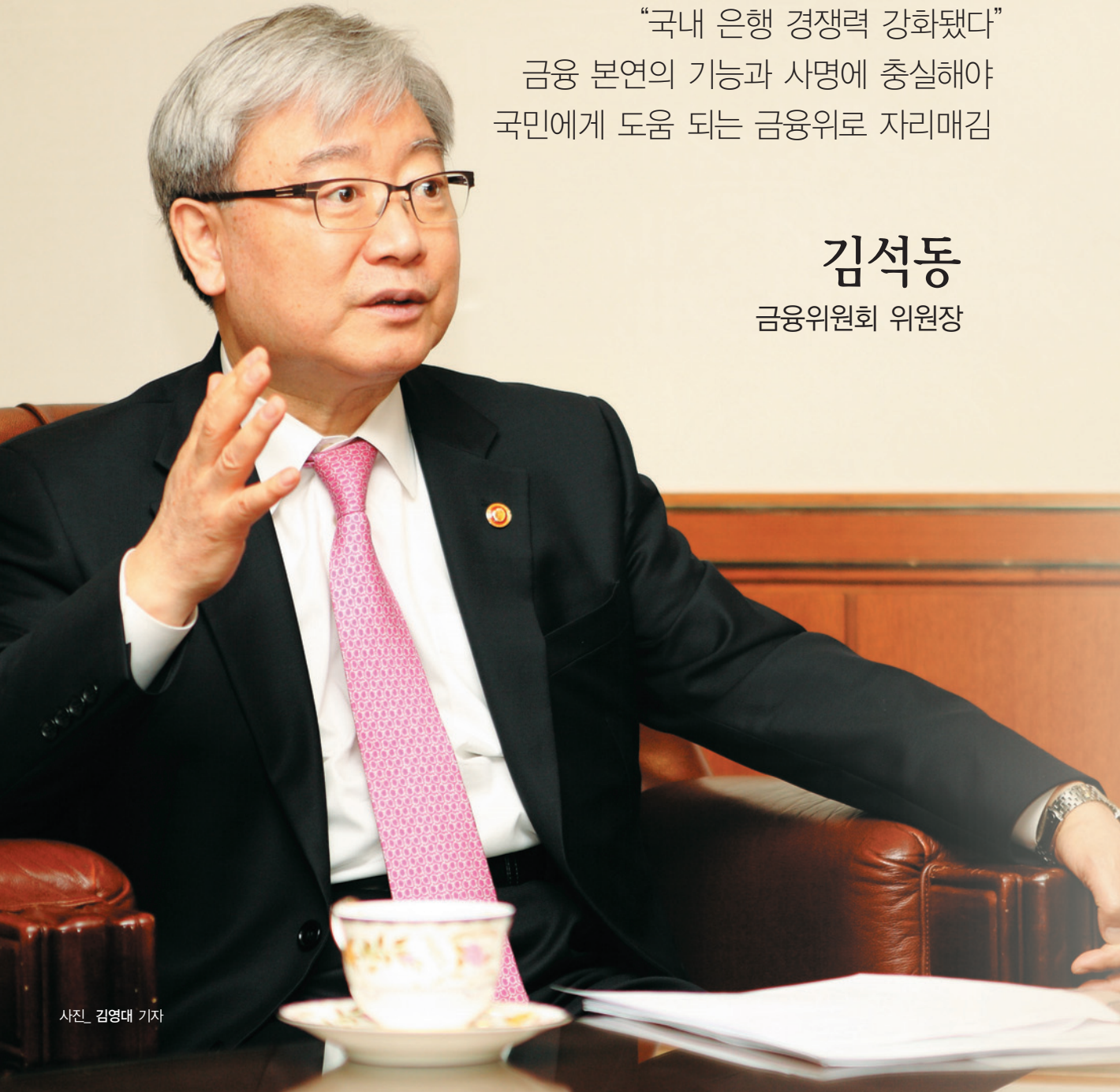


“서민과 기업에 든든한 금융 되겠다”

중기·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에 방점
“국내 은행 경쟁력 강화됐다”
금융 본연의 기능과 사명에 충실해야
국민에게 도움 되는 금융위로 자리매김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_김영대 기자

또 초강수를 썼다. 지난해 16개 저축은행의 문을 닫게 함으로써 부실 저축은행 문제를 일거에 정리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수십 년 이어져 온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 금융권의 대출 관행을 발각 뒤집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 실패에 따르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창업과 중소기업 경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동(59) 금융위원회 위원장. 취임 1년여가 지나는 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참 많이도 해치웠다. 덕분에 반백이던 머리카락이 온통 하얗게 섰으나 “공직자로서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에는 치(治)해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에 따라 후회 없이 내달렸다.

연대보증 폐지로 창업·중소기업 활성화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만한 위험요소는 뇌관을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확신에 찬 김 위원장의 말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라 안팎으로 위기가 한둘이 아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 확산과 장기화, 이에 따른 경기 위축이 가장 큰 문제다. 앞서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고 저축은행 등 취약한 분야는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위기 시 최소한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외화유동성도 확보했으니 이 정도면 눈앞의 급한 불은 일단 끈 셈이다. 시장은 이제 안정을 되찾는 중이고 금융회사들의 위기 대응 능력은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 때보다 크게 개선됐다. 세계적 금융 전문지 <The Banker>가 선정한 세계 100대 은행에 우리, 신한, KB 등 국내 은행 3곳이 포함된 게 한 예다.

하지만 위기의 강도나 지속 기간을 가늠하기 힘든 만큼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저축은행의 경영 악화 가능성이 여전히 부실이 튀어나오면 언제든지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한 것도 그래서다. 나아가 올해 금융정책의 큰 방향은 ‘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금융’에 맞췄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취약계층이 제일 힘들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중소기업과 서민 대책이 꽤 주목할 만하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문제를 낱알이 해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살피고 전문기관을 동원해 심층 연구도 진행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대책들이 올 3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발표된다. 그중에서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안겨 주곤 했던 연대보증 폐지를 들고 나온 게 압권이다. 그는 “연대보증은 독버섯”이라고까지 지목하며 “사업하다 실패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친가, 처가, 친인척, 지인까지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관행을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위원장 역시 공직에 입문하기 전 무역회사를 꾸렸다가 자금난을 겪게 돼 은행 문을 두드렸던 적이 있다. 친가와 처가에까지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쓰라린 기억이다. 연대보증의 폐해는 많은 사람이 겪고 있기에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반길 만하다. 연대보증 부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럽 재정 위기의 영향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실물경제도 그 영향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 연합DB

대폭 사라지면 창업이나 경영 실패에 따르는 부담이 낮아져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실패한 기업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혁신 방안 등을 포함한 각종 대책이 순차적으로 발표되며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도 더욱 내실화한다.

원칙 따라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세계화 시대에는 우리나라 또한 외파로 존재할 수 없다. 좋은 것도 세계를 무대로 수많은 나라와 상호 경제활동을 벌여야 한다. 이는 두 가지 뜻을 함축한다. 하나는 국내 은행들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세계의 은행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최대 은행의 본격적인 한국 시장 공략 선언으로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국내 은행들이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하면서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강점을 살려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예를 들면 정보기술(IT)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외국 자본에 대해 국내 투자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일고 있는 ‘론스타 먹튀’ 논란을 예로 든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몇 년 만에 하나금융에 되팔아 수조 원의 차익을 남긴 것을 두고 금융위가 이를 방조했다는 비난이 일었고 김 위원장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수십 건의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양보했다가는 세계무대에서 도태될 수 있다”며 “내·외국인 동등 대우의 원칙에 입각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흔들림 없는 태도를 고수한다. 앞으로 이러한 원칙을 계속 견지하겠다는 각오도 덧붙인다.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만큼 이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외국 투자자들을 봐야 한다”며 확고부동한 표정이다.

반면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그다. 부(富)에는 책임이 뒤따르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금융권은 수익의 원천이 국민과 사회에 있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힘을 모아 경영 기반을 회복한 만큼 “국민의 기대와 시각이 남다르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한다. 과도한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고 본연의 기능과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권의 방만 경영, 부자 고객 유치 경쟁, 자신들만의 돈 잔치 등 여론의 질타가 잇따랐던 게 사실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요구한다.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게 그것이다. 다만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유도하고 독려하는 입장이라는 생각이다. 금융권이 모범을 보일 때에 금융위의 존재감도 비로소 나타난다는 판단이다.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등 국민경제 발전에 구체적으로 이바지할 때에 비로소 국민이 “금융위원회가 있어 참 다행”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자임한다.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

한다”던 그의 유명한 어록은 바로 이런 충정에서 기인한다. 그는 “시장에 불안요인이 존재하는데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단,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때에는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중소기업·서민 등 취약계층에 초점 맞춘다”

Q 취임 1년여 동안 국내 금융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어떤 일을 했고 평가는 어떤가?

A 안팎으로 위기가 산적한 한 해였다. 대외적으로는 유럽 재정 위기, 주요국 성장 둔화 같은 위기가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누적돼 온 저축은행 문제를 비롯해 가계부채 급증 등의 불안요인이 있었다. 악조건 속에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 은행권 외 화유동성 확보 등에 주력했다. 금융산업 발전 측면에서는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고 자본시장 제도를 개편했다. 그 결과 급락했던 주식시장이 회복되는 등 안정을 되찾고 있다. 하지만 불안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올해에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참이다.

Q 올해 정책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나?

A 올해 역시 유럽 재정 위기의 영향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실물경제도 그 영향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성장률이 지난해 3.8%에서 올해 3.7%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위험요소가 있다면 뇌관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중소기업과 서민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작오다.

Q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해 달라.

A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지난해 92조7천억 원에서 올해에는 106조4천억 원으로 확대하며 기존의 대출 관행도 대폭 손본다. 사업하다 한 번 망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친구, 처가, 친인척, 지인들까지 다 망하게 되는 관행을 확 바꿀 것이다.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하고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도 개선한다. 실패한 기업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강구하는 중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창업·중소

기업 금융환경 혁신방안’이 3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니 지켜봐 달라.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면 자금 지원이 없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전문 투자자시장도 만들 생각이다. 증자도 하고 대주주 주식을 팔거나 자금을 모으는 중간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서민들을 위한 ‘나눔금융’도 적극 펼친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을 더욱 내실화할 것이다. 높은 금리의 비은행권 전세 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하고, 금리 우대가 가능한 보금자리론 공급 대상도 연소득 2천500만 원 이하에서 4천5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직불형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가맹점 권익을 보호하는 등 신용카드 제도도 개선하는 중이다.

Q 연대보증을 ‘독버섯’으로까지 규정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A 공직에 입문하기 전 무역회사를 차린 적이 있다. 당시 석유 파동 등으로 자금난을 겪게 돼 은행 문을 두드렸으나 친가와 처가 등에게까지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해 사업을 포기해야 했다.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겪었을 것이다. 개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인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 책임을 지며, 공동 창업은 개인별 연대보증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창업과 실패에 따르는 부담을 크게 줄일 것이다. 창업 및 중소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정책의 큰 방향을 ‘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금융’에 뒀다. 서울 서초구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경영자 조찬회에서 올해의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하는 김석동 위원장. 사진: 권속희 기자

Q 중소기업 주식 전문 투자자시장이란?

A 올해 안에 중소기업 주식 거래를 특화한 전문 투자자시장을 신설해 자본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코스닥 상장까지 이르기 전 단계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거래시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현재 개설돼 있는 코스닥시장은 진입 문턱이 높고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프리보드는 거래가 부진해 역할이 미흡하다. 단, 고위험·고수익인 만큼 시장 진입은 기관투자자 등의 전문 투자자로 한정할 방침이다. 개설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으며 3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Q '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은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나?

A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는 대신 직불형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는 게 카드 대책의 핵심이다. 지난해 말 발표한 후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신용카드 발급은 결제 능력에 맞게 하고, 이용한도를 책정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및 모범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다. 3월 말까지 1천만 장의 휴면카드도 정리한다. 직불형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혜택도 확대한다. 소득공제율은 이미 25%에서 30%로 높였고 앞으로는 소득공제 한도금액도 늘어나며 카드사별로 신용카드와 동등한 수준의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체크카드 상품을 출시한다.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업종별 수수료율 격차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Q 서민들은 돈줄이 말라 애타는데도 정부와 금융권은 가계 빚이 국가 경제의 뇌관이라며 고삐를 죄다. 가계부채 압력을 원만히 해소하면서 서민금융을 활성화할 비책은 없나?

A 늘어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 가계부채 대책에 이어 '서민금융 기반 강화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했다. 예를 들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김석동 위원장(우)과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개장을 알리는 버튼을 누른 뒤 박수 치고 있다. 사진: 신준희 기자

면 미소금융의 20대 대출자 비율이 6.7%로 저조하다는 점에 착안해 청년창업 지원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경영 컨설팅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은 기업·은행재단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양호한 저소득층에 대해 미소금융 지역재단에서도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그밖에 전 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다.

“국내 은행 경쟁력 강화됐다”

Q 유럽 재정 위기의 장기화로 국내 금융사들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우려가 많다.

A 유럽의 상황에 대해 한 치 앞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상황이 단기간에 호전되지도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경제도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을 꾸준히 해왔다. 국내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비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저축은행 등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위기 시 최소한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외화유동성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은 5개월 만에 6배 이상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의 위기 대응 능력은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 때보다 크게 개선됐다. 따라서 대외여건이 다소 나빠지더라도 금융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지만 위기의 강도나 지속 기간을 가늠하기 힘든 만큼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외화유동성 확보, 과도한 외형 경쟁 방지, 관련 규제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는 중이다.

Q 올해부터 저축은행들이 상시 구조조정 체제에 들어간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A 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규모를 확대하고 대주주가 경영을 방만하게 하면서 부실 저축은행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 상태에 놓여 있었다. 더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풍선에서 바람을 시급히 빼야 했다. 지난해 85개 저축은행 중 16개 저축은행을 과감하게 정리한 이유다. 급한 불은 껐다지만 올해에도 위기가 여전한 저축은행의 경영이 악화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시장에서 상시적으로 퇴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그래야만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 머튀' 논란에 대해 김석동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외환은행 노동조합 독립 경영 보장 등 최종 합의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과 손을 맞잡은 김석동 위원장. 사진 이상학 기자

시장이 안정되고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다.

Q 세계적 수준의 토종 투자은행(IB) 육성을 역설하지만 되레 국내 금융체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는데.

A 이제는 우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토종 투자은행이 나올 때가 됐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를 모르지 않지만 대부분은 미국 투자은행들의 과다한 부채가 세계적 금융 위기로 이어졌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 게다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투자은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 정부의 엄정한 감독과 투자은행의 자체 관리를 바탕으로 우리 금융은 물론이고 미래의 경제를 개척하는 선진 투자은행이 멀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출현할 것으로 기대한다.

Q 중국공상은행의 본격적인 한국 시장 공략 선언으로 은행권이 슬렁인다. 대책이 있나?

A 지난해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38개의 외국계 은행이 54개 지점을 두고 영업 중이다. 이중 중국의 경제나 한-중 교역 규모에 비춰 볼 때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은행의 비중은 상당히 작은 편이다. 그러니 중국 은행들 입장에서 한국 시장 영업을 확대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국내 은행들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



지난해에 16개 부실 저축은행의 문을 닫은 데에 이어 올해부터는 경영 악화 등으로 부실해진 저축은행은 언제든지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게 됐다. 사진: 신영근 기자

내에서도 전 세계 은행들과 경쟁해야 하므로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하면서 비교우위가 있는 정보기술(IT)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살리는 등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 가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국내 은행들의 규모나 건전성이 개선돼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세계적 금융 전문지 <The Banker>가 선정한 세계 100대 은행에 우리(79위), 신한(85위), KB(87위) 등 국내 은행이 3개나 포함돼 있다.

“금융 본연의 기능과 사명에 충실해야”

Q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하나금융에 되팔아 엄청난 차익을 남긴 것을 두고 감독 당국이 ‘먹튀’를 방조했다는 비난이 거세다.

A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고 대한민국은 외따로 존재할 수 없다. 좋은 싫든 세계무대에서 여러 나라와 상호 경제활동을 하며 발전해 가야 한다. 마뜩치 않다 해도 외국 자본에 대해 국내 투자자와 동등하고 합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

렇지 않고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했다가는 세계 무대에서 도태될 수 있다. ‘내·외국인 동등 대우’의 원칙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했다.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만큼 이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을 봐야 한다.

Q 총선과 대선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우리금융과 산은금융 민영화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A 이미 10년을 끌어 온 우리금융 민영화는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에 우리금융 민영화에 성공하지 못했으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공론화하면서 민영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잠재적 투자자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형 선거가 2개나 잡혀 있는 터에 왜 굳이 일을 벌이느냐고 묻는 이도 적지 않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고 이왕이면 빨리 해야 하는 일이다.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산은금융 민영화는 세계적 수준의

종합금융그룹(CIB) 육성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산은법 개정과 정책금융공사법 제정을 통해 산은은행을 분리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 2014년 5월까지 산은금융의 최초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산은법 규정에 따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민영화를 추진해 갈 계획이다.

Q 미국 월가 시위에서 금융권의 탐욕이 화두에 올랐고 우리나라도 표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금융권과 금융인의 사회적 책무가 뭐라고 보나?

A 금융권은 기본적으로 수익의 원천이 국민과 사회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권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힘을 모아 경영 기반을 회복한 만큼 국민의 기대와 시각이 남다르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과도한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고 본연의 기능과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임금, 영업, 경영 방식, 수익 창출 및 활용 등의 과정에서 더욱 엄중한 책임감이 요구된다. 이익이 나면 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확충하고 보수는 생산성 향상과 장기적 성과에 상응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가계·기업 대출 등 자금 중개 기능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도 배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 감독의 큰 틀을 당국과 산업이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에서 시장과 소비자가 주도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Q 부자 고객 유치에 혈안이 돼 있는 금융권을 보는 눈길이 곱지 않은데.

A 금융회사가 부자 고객을 유치하는 일에만 치중하고 다수의 고객인 서민을 도외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 활동은 기본적으로 해당 회사의 전략에 해당하므로 정부에서 관여하기 어렵다. 그렇더라도 부자 고객을 유치하려는 활동이 서민들의 불이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이나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균형 있는 영업을 통해 시장의 평판을 관리해 가기 바란다.

Q 평소 강조하는 '리세스 오블리주'를 금융권이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이 있나?

A '리세스 오블리주(richness oblige)'란 영연방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로 꼽히는 조너선 삭스가 <차이의 존중>이라는 저서에서 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언급했다. 모름지기 성공한 사업가라면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선행이나 자선을 베푸는 데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에는 책임이 뒤따르며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삭스에 따르면 금융권이 리세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은 자발성에 기초해야 하며 금융 당국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정부가 전략을 세우고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금융권이 스스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리세스 오블리주가 확산되도록 독려하겠다.

“국민에게 도움 되는 금융위”

Q 취임 때부터 '금융위의 존재감'을 강조했다.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싶은가?

A 국민이 “금융위원회가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참 다행”이라고 말할 때 금융위의 존재감이 나타난다. 이를 위해 금융위의 전 임·직원이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금융산업 종사자



우리나라는 금융권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힘을 모아 경영 기반을 회복한 만큼 금융권이 과도한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고 본연의 기능과 사명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기대가 높다. AP 연합뉴스

들을 배려하되 무언가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단호한 결단력을 보여야 한다.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때 금융위의 역할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때에 비로소 모두가 금융위의 존재감을 인정해 줄 것이다.

Q 요즘처럼 자유로운 시대에 유독 ‘치(治)’를 강조하며 ‘관치(官治)의 화신’이라는 별명까지 듣고 있다.

A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에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규율과 질서

가 부족한 부분에서 금융 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시장에 불안요인이 존재하는데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은가? 단,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에는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직설적 화법으로 구설수에 오를 때가 종종 있다. 어법을 바꿔 볼 생각은 없나?

A 한 개인이 아닌 금융위원장으로서는 하는 발언은 시장이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불확실한 발언으로 이런저런 해석이 나온다면 오히려 시장이나 산업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한다.

김석동은 누구?

“취임 때 이미 먹구름 심해 집안 단속 철저히 했다”



사진_이정훈 기자

Q 왜 도난마.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한마디로 표현하기에 이처럼 잘 어울리는 말도 없을 듯하다. ‘형클어진 삼을 잘 드는 칼로 자른다’는 뜻으로 아무리 복잡하게 얽히고 꼬인 문제라도 빠르고 숨씨 있게 처리하는 것을 일컫는 표현이다.

부실이 누적돼도 누구 하나 감히 손대지 못했던 저축은행에 대대적으로 칼질을 했던 것도 그것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85개 저축은행 전부를 실사해 16곳을 문 닫게 했다. 자산 기준으로는 전체 저축은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한칼에 정리한 것이다. 당시 온 사회를 발각 뒤집었을 정도로 큰 파도가 몰아쳤고 지금까지도 여파가 완전히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하루 빨리 해야만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소신 때문이다. 덕분에 저축은행발(發) 뇌관은 터지지 않았고 서민을 위한 본연의 기능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중이다.

우리 경제의 위험 요소 중 하나를 가계부채로 보고 취임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 관계 부처회의를 소집해 부처 간 인식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끌어낸 후 서민금융 기반 강화 종합대책, 카드사 대책, 증권시장 대책 등을 줄줄이 내놓으며 6개월 만에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특유의 속도감 있는 추진력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야 할 게다.

뒤이어 금융시장이 어려워질 것을 예견하고 단기부채는

Q 몹시 단호하고 결단력도 강한데 마음에 새겨 두고 있는 이상적인 리더십이 있다면?

A 사회 곳곳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조직의 수장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성과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에는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두 가지 리더십을 마음에 담고 있다. 하나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용기와 결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방성과 포용성을 갖는 것이다. 변화를 신속히 받아들이며 조직 내의 다양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m**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



최근 금융권의 방만 경영, 부자 고객을 유지하려는 경쟁, 자신들만의 돈 잔치 등 여론의 질타가 잇따른 데 대해 김석동 위원장은 엄중한 사회적 책임감을 묻는다. 사진 최재규 기자

줄이고 여유자금은 늘리게 하면서 외환건전성 높이기에 주력했다. 예상대로 유럽발 재정 위기로 국내 시장에도 주름살이 밀려왔지만 적어도 3개월은 끄떡 없이 버틸 수 있도록 위기 대비 능력을 갖춰 놓은 덕분에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고 국가신용등급은 오히려 올라갔다. 그는 “취임 때 이미 떡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며 “조만간 폭풍우가 몰아친다는 징조로 보고 지붕과 창틀을 정비하는 등 집안 단속을 꼼꼼히 했다”고 지난 1년여를 회고한다.

요즘 그는 또 다른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 금융산업을 새롭게 재편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게 자본시장통합법 개혁이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렸지만 과감하게 밀어붙여 한국형 헤지펀드를 만들었다. 몇 달 만에 4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앞으로 단기간에 더욱 큰 산업으로 성장하리라는 게 그의 예상이다. 이를 두고 그는 “금융시장 안정과 새로운 먹을거리 찾기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앞으로 자산운용시장이 더욱 커지고 금융 엘리트들이 양산될 것이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는다.

이 모든 일을 쾌도난마로 처리하느라 정작 자신의 머리카락에는 온통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다. 하나 같이 자리를 걸어야 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들을 쉴 틈 없이 처리하느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고생도 참 많이 했다. 뜻하지 않게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고 여론의 못매를 두드려 맞기도 했다. 모두가 엄혹한 시절에 금융계 수장을 맡은 죄(?)다.

하지만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니 후회나 미련은 없다. 그런 그에게 훗날 역사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 정당한 평가가 그리울 법도 하건만 그는 그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일하면 적어도 야속한 평가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할 따름이다. **m**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

1953년 부산 출생 _ 경기고 졸 _ 서울대 경영학과 졸 _ 1979년 행정고시 합격(23회) _ 1981~94년 재무부 사무관 _ 1995~97년 재정경제원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 총괄반장·외화자금과장 _ 1998~99년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증권제도과장 _ 1999~2004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장·감독정책1국장 _ 2004~05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금융정보분석원장·차관보 _ 2006~07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_ 2007~08년 재정경제부 제1차관 _ 2008~2010년 농협경제연구소 대표 _ 2011~현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_ 상훈 : 재무부 장관 표창(1987), 대통령 표창(1987), 근정포장(1992), 고은문화상(2000), 홍조근정훈장(2003) _ 저서 : <금융시장론(共)>(2007, 박영사)